

미래차국가산단에 '한국형 우븐시티' 조성

광주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와 인공지능(AI)을 융합한 미래차국가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광주시가 'AI 더브레인(The BRAIN) 시티 광주' 청사진을 그리는 데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에 인공지능과 자동차 산업 기반의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집중한 국비 지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부지 15곳에 광주가 제출한 미래차국가산단을 포함했다.

미래차국가산단 예정부지는 광산구 오운동 일대 338만4000㎡(102만평)이다. 이중 95.6%인 323만4000㎡(98만평)는 환경평가 1·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미래차국가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도 해소됐다.

광주시는 자동차와 인공지능이 융합된 미래의 신도시 '더 브레인 시티 광주'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주 제조업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인공지능과 결합해 집적화하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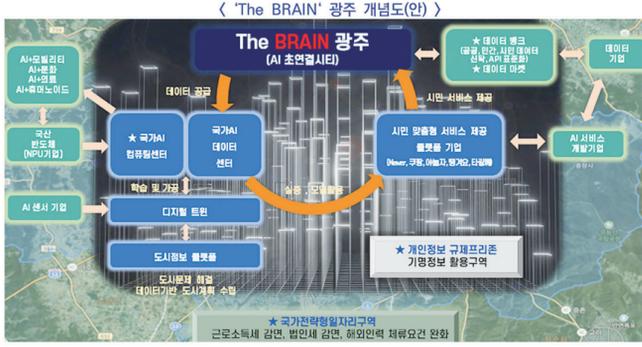
광주시는 자율주행차와 로봇, 인공지능 도시관리, 스마트홈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현실 환경에 접목해 실증하는 미래형 신도시 '한국형 우븐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본의 도요타 우븐(Woven)시티는 다양한 첨단기술을 현실 환경에 구현한 빛채로 미래형 도시로 시즈카현 스소노시에 위치해 있으며 약 72만㎡(22만평)에 2000여 명이 입주해 있다.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 부지에 '메가 샌드박스 시범 도시'를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건설하는 데 사업비 1조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를 연결하고 광주연구개발특구와 광주송정역, 영광으로 연결되는 철도 등을 신설해 국가산단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메가 샌드박스과 연계한 연구개발



광주시 인공지능더브레인시티 개념도

광주 'AI 더 브레인 시티' 구상...메가 샌드박스 추진 국가전략산업단지 선정·그린벨트 해제...개발 본격화 국부펀드 지원·개인정보 규제해제 정책 뒷받침 필요

(R&D)과 기반구축, 교육·인력 양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함께 민관협력을 위한 통합 전담기관 설립도 구상하고 있다.

미래차국가산단을 빛그린국가산단·진국산단과 연계한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를 구축할 계획도 세웠다.

인공지능·모빌리티 기술을 개발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학습·성장·실습이 가능한 주행사험장(PG) 설치, 신재생에너지(RE100)와 자원순환을 기반으로 한 산단도 조성할 예정이다.

미래차국가산단이 본격 가동되면 신규 일자리 1만개 창출, 2조원 규모의 경제 효

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의 국가전략사업 지정에 따라 올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 2027년 토지보상협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보상이 완료된 부지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2031년 공사를 마치고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광주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데이터 집적과 국가AI데이터센터 등을 통한 학습, 인공지능 기업 유치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부펀드

국가 모빌리티진흥원 광주 설립



UAM, 드론, 자율주행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기능을 담당하여 다양한 분야의 산업 생태계로 이어져 다양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 경제 활성화



이와 함께 광주가 모빌리티·인공지능·문화콘텐츠·에너지·메디헬스케어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에 대한 규제 특구 지정 등이 필요하다.

최대 인공지능산업심장은 "미래차국가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광주 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미래모빌리티 산업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가적 지원을 통해 미래차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광주시청제공

지원 전체 조건이다. 이어 메가 샌드박스 시범도시 사업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해제하고, 기밀정보 활용 구역 지정도 해결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국가전략형 일자리로 지정해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고, 해외 인력 체류 요건 완화 등의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와 함께 광주가 모빌리티·인공지능·문화콘텐츠·에너지·메디헬스케어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에 대한 규제 특구 지정 등이 필요하다.

최대 인공지능산업심장은 "미래차국가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광주 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미래모빌리티 산업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가적 지원을 통해 미래차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가 모빌리티·인공지능·문화콘텐츠·에너지·메디헬스케어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에 대한 규제 특구 지정 등이 필요하다.

전남도, 에너지산업 거점 조성 사업 본격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국토부 중앙심의 통과

전라남도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5월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계획 승인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로써 전남도가 역점 추진해온 에너지산업 거점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해당 사업은 한국도주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다. 총 3천68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나주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2만㎡(36만 평) 부지에 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사업은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기업투자 수요 부족 등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철회됐지만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의뢰해 통과됐다.

2024년 6월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신청한 지 10개월만인 지난 4월 30일 중앙심의를 통과해 올해 토지 보상 절차를 착수하고, 2026년 하

반기 착공하는 등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나주시, LH,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여러차례 합동회의를 개최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사업 시행 구역 결정, 보상계획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제도적·실무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했으며, 협업체계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의 초석이 됐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향후 에너지밸리 조성, 신소재 및 나노융합소재 산업 육성, 친환경 IT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지향적 산업 기반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부 심의 통과와 전남도와 관계기관들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부 심의 통과와 전남도와 관계기관들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부 심의 통과와 전남도와 관계기관들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1/매일 기자

전남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3곳 추진

농식품부 공모에 무안군·신안군에 이어 함평군 추가 선정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2차 공모에서 함평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에서는 1차 공모에 선정된 무안군, 신안군을 포함해 총 3개 지구가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3개 지구에는 2027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총 300억 원이 투입돼 청년 귀농·귀촌인을 위한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86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구별로는 무안군과 신안군에 각 28호, 함평군에 30호가 조성된다. 단지에는 공동보육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자녀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와 보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최대 2회 갱신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다.

무안군은 환경면 양하리에 28호 규모

의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해 첨단농업복합단지 및 스마트팜과 연계,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

신안군은 도초면 발매리에 28호 규모의 단지를 마련해 '도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 섬 지역의 주거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함평군은 함평읍 수호리 일원에 30호 규모의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며, 인근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해 생산과 주거, 생활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립형 농촌 정주 모델을 구축한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이 안심하고 정착할 주거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이 농촌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하도록 주거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우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전라남도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인재육성 고속도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25년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연수 참가자를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연수는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업 종사자에게 해외의 우수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역량을 키우고, 소득증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

전남도,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연수 참가자 모집

농축업·어업·산림원예·제조업·신산업·관광·스포츠 분야 105명

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연수는 농축업, 어업, 산림원예, 제조업, 신산업, 관광, 스포츠, 7개 분야에 각 15명씩 총 105명을 선발해 미주 및 유럽 주요국의 선진 산업 현장과 글로벌 박람회

회 등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 사업장에 2년 이상 종사 중이며,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단 1인 사업자나 경영체로 등록된 농·어업인도 지원 가능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는 제외된다. 참가를 바라는 산업 종사자는 7일까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 문외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팀(061-285-9487)으로 하면 된다.

1/신종팔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